

28. '96年度 建設交通部 業務計劃

資料提供：建設交通部

주요 업무 계획

◆96년도 건설교통 시책방향◆

- 우리부는 교통·주택·부실방지 등 당장 국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와 함께 국토 계획·SOC확충 등 국가 100년 대계를 내다보며 추진해야 하는, 다양한 업무를 관장
- 밖으로는 국경없는 경제전쟁에 대비하여 「국가경쟁력 강화」를 통한 세계화를 추구하고, 안으로는 지방화·자율화에 부응하여 「살기 편하고 기업하기 쉬운」 여건조성에 총력
- 지난 한해, 통합부처로서의 기반을 닦은 데 이어, 금년에는 국민들 피부에 와 닿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, 생활주변의 조그만 일부터 책임을 다하는 행정을 구현
- 금년도 6대 중점과제
 - ① 경쟁력 강화를 위한 「사회간접자본의 확충」
 - ② 지방화시대의 부응하는 「지역발전 추진」
 - ③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「교통문제 해결」
 - ④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「물류·산업단지 지원」
 - ⑤ 주거생활 향상 및 부동산 시장 안정
 - ⑥ 부실방지 및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

1.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

□21세기 기간교통망구축을 위한 양대 국책사업의 차질없는 추진

- 수도권신공항 : 2000년 개항 목표(총공정 23.8%→41.1%)
 - 진행중인 5개공구 부지조성공사는 금년중 완료
 - 여객터미날은 '96상반기 착수하고, 관제탑등 부대시설은 '96말 착수
 - 신공항고속도로· 화물터미날 등 민자유치사업도 금년중 추진
- 경부고속철도 : 2002년 개통 목표(총공정 12%→19%)
 - 천안-대전 시험선구간(98년 개통)은 50%공정을 80%까지 진척
 - 서울-대전 구간(2000년 개통, '95.5 착공)은 20%까지 진척
 - 경주노선· 부산차량기지 위치등 현안은 상반기중 확정

□효율과 안전이 극대화된 도로망 구축

- 총 26개의 고속도로사업을 추진(준공6, 착수9, 계속11)
- 공단·항만 연계도로 및 혼잡구간 457km 4차선 확장공사 추진
- 병목지점 개선·입체교차로 설치등 운영효율개선에 역점추진
- 지방도 및 시관내 국도우회도로에 대한 건설비 국가지원

□간선철도의 수송능력 제공

- 호남 및 동서고속철도 추진(호남 : '96하반기중 건설기본계획 확정, 동서 : 민자유치를 위한 시설사업기본계획 확정)
- 수원-천안 2복선전철화(90~2000)·영동선 전철화(89~96)·전라선직선화(88~2001)·호남선 복선화(91~2000)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
- 철도경영개선 대책추진 : 인원감축, 인사·예산등 자율권부여

□항만시설의 확충

- 부산항 및 광양항 확충으로 2000년대 동북아 중심항만 육성
 - 부산항 4단계 : 97년까지 완료 : 가덕도신항만 : 연내에 기본계획수립
 - 광양항 : 1단계 97년 완료, 2단계 2001 완료목표로 추진
- 권역별 거점항 개발 추진
 - 울산·새만금신항 : 금년중 기본설계 완료 및 외곽 실시설계 착수

- 인천북항·목포신외항·포항신항만·보령항은 신항만간 투자우선 순위에 따라 건설시기 조정

□권역별 거점공항 확충

- 청주공항(92년 착공) : 금년중 완공
- 영동권신공항 : 금년중 실시설계 완료, 99.2 동계아시안게임전 개항
- 김포·김해·대구·여수·울산등 기존공항의 터미널등 시설확충

□수자원 개발

- 다목적댐·광역상수도 건설(수자원이용율 23%→26% : 2001)
 - 다목적댐 : 건설중 6개·계획중 2개(영월댐은 조사설계 착수)
 - 광역상수도 : 2개 완공·6개 신규착수·3개 조사설계
- 금년중 민자유치로 경인운하 건설에 착수
- 2000년대 용수수요에 대비 「수자원장기종합계획」 수립

□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활성화

- 12건 사업자선정(고속도로2, 경량전철2, 신공항6, 경인운하·동서고속철도)
- 금년민자유치사업은 수익성확보가 가능한 소규모사업에 치중

2.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지역발전 추진

□지방대도시와 신산업지대를 중심으로 7개의 광역권개발 추진

- 부산~경남권 및 아산만권('94. 12 개발계획 확정)은 금년중 핵심사업에 대한 세부개발계획 수립
 - 아산만권 : 천안 신시가지 개발계획 수립등
 - 부산~경남권 : 가덕도 신항만 개발계획 수립등
- 나머지 5개 광역권(대구~경북·광주~목포·대전~청주·군산~장항·광양만권은 금년상반기중 개발계획 확정

□체계적인 수도권 정비추진

- 과밀·혼잡의 극복과 수도권내부의 불균형 시정

- 수도권외 금융·정보통신 등 국제기능 강화
- 서울중심의 공간구조를 다핵화하기 위한 자족거점지역 육성
- 수도권전체를 연결하는 순환고속도로·철도등 광역교통망 구축

※상반기중 「수도권 정비계획」 확정

-공장·대학등 인구집중 유발시설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실화

□낙후지역 및 특정지역 개발사업추진

-낙후지역을 금년 3월까지 「개발촉진지구」로 지정

-추진중인 3개지역의 개발사업(백제문화권·제주도종합개발계획·전주권2단계)을 차질없이 추진

□도시계획제도 개선 : 지자체·국가간 역할 정립·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기집행·개발제한구역 불편해소 등

3.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교통불편 해소

□도시철도·버스중심의 대중교통체계 정착

-도시철도 확충 : 대도시권에 2001년까지 512.3km 건설(도시철도 수송분담율 : 서울 28% → 50%, 부산 8.6% → 40%)

- 수도권 : 서울 5·7·8호선 일부구간 및 일산선 금년중 개통
- 부산권 : 2호선 98년 완공, 3호선 금년말 착공
- 대구·인천 : 1호선 금년 착공, 2호선 및 인천 1호선 지속추진
- 대전·광주 : 금년말 공사 착수

-경량전철 건설(민자유치) : 서울-하남, 부산-김해

-버스전용차로 확대('95 : 408km → '96 : 535.5km) 및 버스요금카드제 정착('95 : 수도권 → '96 : 부산등), 버스시설 고급화, 버스노선 조정

□기존 교통시설의 운용효율화

-전자감응식 신호체계 설치('96 서울지역 시범설치, 서울시·경찰청)

-병목지점 교차로 입체화·횡단보도 조정·가변차선 확대

□교통수요 절감 및 주차난 해소

- 주차장설치 상한제 실시(교통혼잡 가중지역) 및 혼잡통행료 부과('96 서울), 수요절감(조기출근·통근버스운영)업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
- 기업체 조기출근제·통근버스 운영 적극 유도
- 교통영향평가지의 실효성 확보·도심재건축 및 재개발에 따른 교통개선대책 수립

□교통안전문화 정착, 국민홍보강화, 사고다발지점 개선, 노후수송시설 개체 등

4.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물류 및 산업단지 지원

□2003년까지 현재 17%인 물류비용을 11%로 절감(미국 7%·일본 11%)

- 수도권·부산권 등 지역거점별로 대규모 물류시설을 확충
 - 수도권 내륙화물기지(의왕·부곡) : 금년중 완공
 - 부산권 내륙화물기지(양산) : 98년 완공목표로 차질없이 추진
 - 중부(청원·연기)·영남(김천)·호남권(장성) 복합화물터미널 : 금년중 건설기본계획 및 민자유치계획 수립
 - 전국을 대상으로 「유통단지종합개발계획」을 수립
- 물류업무의 일괄처리서비스를 위한 「종합물류정보망」 구축
- 물류시설·장비의 기계화·자동화를 위한 「표준화사업」 추진
- 화물운수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자율성 제고

□신경제기간중 매년 760만평의 공장용지 공급계획에 따라 금년에도 적기·적소의 공장용지 공급

- 구미4단지·발안·사천등에 산업단지 5~600만평 신규지정
- 아산·녹산·군장등 진행중인 전국 100여개 4천여만평의 공단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
- 산업단지의 분양가 인하 및 분양추진을 위한 국가지원확대(진입도로·공업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, 500억원 융자 등)
- 공장·물류·연구·주거기능이 복합된 첨단산업단지 개발
- 산업단지 개발 및 공장설립절차 간소화시책 조기 정착

5. 주거생활 향상 및 부동산가격 안정

□선진 주거복지의 실현

- '96년 주택건설계획 : 50~60만호(신경제기간('93~'97)중 285만호)
 - 신경제기간 소요 공공택지 5,400만평중 미확보 89만평을 '96 상반기중 확보(수도권 소요 2,400만평중 미확보 272만평 조기확보)
 - '96년중 총 8조원의 주택자금을 조성, 주택건설 및 구입 지원
- 저소득층 주거안정시책 강화
 - 공공임대주택 건설확대(95년 7만호→96년 8만호) 및 민간임대주택 건설촉진을 위한 임대업 등록요건 등 규제 완화
 - 재개발·재건축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
- 주택산업육성을 위한 지원강화
 - 민분양주택 구입자에 대한 자금지원등 「주택시장안정대책」 지속추진
 - 분양가 자율화 범위 확대·주택규모 제한완화 등 규제완화 추진
- 수요변화에 부응한 3대동거·원룸주택 등 다양한 주택공급

□토지시장의 지속적 안정

- 토지전산망등 투기억제수단의 유기적 연계로 투기적 수요차단
- 투기예고지표의 적극 활용으로 투기조짐 조기포착 및 강력단속
-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공급 촉진
- 토지거래허가제등 토지공개념제도를 개선하여 국민불편 해소

6. 부실공사 방지 및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

□삼풍백화점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「부실방지 및 경쟁력강화 종합대책」을 차질없이 추진

- 기획·설계·시공·감리등을 종합수행하는 공사체계 도입
- 십장의 제도권 흡수를 위한 「공사현장 실명제」 도입
- 기능공에 대하여 공제금을 지급하는 「복지제도」 도입

- 건설업체에 대한 신용평가제 도입으로 부실업체 배제
- 민간 건축활동에 대한 감리강화 : 감리전문회사 감리
- 건축설계 허가 안전심의 강화 : 다중이용시설의 구조기술사 확인
- 품질관리체계 구축 : 시공자 현장 레미콘 생산시설 확대 · 자재 표준화 · 철강재 「공장 인증제」
- 부실공사에 대한 엄격한 신상필벌 원칙 확립

□ 시설물 안전관리강화 : '95.1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 제정

- 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조기 정착
 - 점검대상 : 총 4,827개소(교량 · 제방 · 대형건축물등)
 - 점검주기 : 일상(분기 1회) · 정기(1~3년 1회) · 정밀(5년 1회)
- 개보수 대상 시설물(교량 · 지하철 · 항만등 714개소)은 금년까지 완료
- 안전진단 대상 다중이용시설물 범위확대(3만m²이상→5천m²)
- 안전진단 기술지침 마련 및 시설안전공단등 안전진단기관 육성

□ 책임행정 구현

- 철저한 현장관리 · 권한과 책임 명확화
- 엄격한 신상필벌의 인사원칙 확립

세 부 추 진 계 획

I. 96년도 중점시책방향

부처출범 2년째를 맞이하여

- ◇밖으로는 국경없는 경제전쟁시대를 맞아 「국가경쟁력강화」를 통한 「세계화」를 추구
- ◇안으로는 지방화·자율화에 걸맞는 선진행정체제를 구축하여 「살기 편하고 기업하기 쉬운」 여건을 조성
- ☞특히,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도록 「생활의 질」을 높이는 데 통합부처의 역량을 집결

중 점 추 진 과 제

- 21세기 국토관리의 청사진 마련
- 경쟁력강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
-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지역발전 추진
-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교통불편 해소
- 기업애로해소를 위한 물류·산업입지 지원
- 주거생활 향상 및 부동산시장 안정
- 부실방지 및 건설산업 경쟁력강화

II. 21세기 국토관리의 청사진 마련

- ◇「세계화」에 부응하여 우리국토가 대륙과 해양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개방형 국토골격을 형성
- ◇사회간접자본을 체계적으로 확충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루어 국토의 생산성을 극대화

□지난 72년부터 3차에 걸쳐 추진된 국토계획은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발전에서 크게 공헌

- 1차 계획(72~81) : 포항·창원등 대규모 공업단지·고속도로·항만·댐등 거점위주의 산업기반시설 확충
- 2차 계획(82~91) : 주택·맑은물 공급등 국민복지 증진과 수도권 억제등을 통한 국토구조의 다핵화 추진
- 3차 계획(92~2001) : 서해안 신산업지대 개발·고속교류망 구축등 지방분산형 국토골격 구축

□국민소득 1만불 시대·지자체실시·WTO체제 출범·세계화추진·통일가능성 증대등 달라진 대내외적 여건을 반영하여 3차 국토계획을 수정, 21세기 국토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

- 대륙과 해양으로 뻗어나가는 개방형 국토골격 형성
- 지역특성에 맞는 자립적 지역경제기반 정착
- 교통·환경·주거등 생활의 질적향상을 중시
- 통일을 지향하는 국토기반 구축

□지난해 마련된 시안을 바탕으로 관계부처협의와 여론수렴을 거쳐 금년 상반기중 제3차 국토계획 수정계획을 확정

Ⅲ. 경쟁력강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

- ◇국토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투자조정
- ◇국민생활의 안전과 편리증진을 위한 중점 투자
- ◇21세 동북아 중심국가를 겨냥한 전략적 투자증진

1. 21세기 기간교통망 구축을 위한 양대 국책사업의 추진

□수도권 신공항

- 2000년 개항에 대비하여 각종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
 - 현재 진행중인 5개공구의 부지조성공사는 96년까지 완료
 - 배후지원단지 방조제 및 정비·급유시설등 잔여 3개공구의 부지조성공사는 96년초 착공하여 97년까지 완공
 - 여객터미널 건축공사는 96년 상반기 착수, 관제탑등 주요부대시설 공사는 96년말 착수
 - 현재 23.8%인 전체공정을 연말 41.1%까지 진척
- 공항관련 민자유치 사업의 적기 추진
 - 지난해 착공된 신공항 고속도로는 공항개항 일정에 맞추어 견실시공 및 공정관리 에 역점('96 목표공정 : 16.8%)
 - 민자유치 6개 사업중 화물터미널등 3개시설은 상반기중, 항공기정비고등 3개시설은 연말까지 사업시행자를 선정
- 신공항건설에 따른 각종 인·허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「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」 을 임시국회에서 개정
- 신공항을 동북아 중심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, 외환·금융·정보통신등 첨단기능과 주거·상업·위락시설이 종합연계된 주변지역 개발계획을 수립

□경부고속철도

- 2002년 개통을 목표로 금년중 전구간 본격 공사시행
 - 천안~대전 시험선 구간은 97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50% 진척중인 노반공사의 공정을 80%까지 추진
 - 작년 5월에 착공한 서울~대전구간은 2000년 개통목표로 20%까지 공사추진
 - 대전이남 구간도 금년중 착공
 - 현재 12%인 전체공정을 연말까지 19%로 진척
- 경부고속철도 건설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안과제를 금년중 조속한 시일내 마무리
 - 경주노선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상반기중 해결책 강구
 - 부산 차량기지 위치선정 문제도 조속히 확정
- 차량제작 및 기술이전의 차질없는 추진
 - 금년중 기술전수요원 308명을 프랑스 현지에서 파견
 - 기술이전을 토대로 고속철도 기술개발사업을 중점추진
- 고속철도 정차역을 중심으로 역세권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고속철도와 도로·철도등 연계교통망계획을 금년중 수립

2. 효율과 안전이 극대화된 도로망 구축

- 남북 7개·동서 9개축의 격자형 고속도로망 구축을 앞당기기 위하여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
 - 준공(6개) : 서울외곽중 평촌~안양·서해안중 안산~안중·양산~구포·진주~서진주·고서~순천·냉정~구포
 - 착수(9개) : 당진~서천·원주~홍천·노원~퇴계원·천안~논산·대전~당진·중부내륙·구미~옥포·내서~냉정·이현~성서
 - 계속(11개) : 서해안·시흥~안산·부산~대구·대구~춘천등
- 국도는 병목구간등 물류난해소에 시급한 구간에 중점 투자
 - 주요 공단과 항만의 연계도로 및 기존 혼잡구간 457km에 대하여 4차선 확장공사를 시

행(총 혼잡구간 : 3,036km)

- 병목현상의 주요인인 읍·면 우회도로중 금년에 68개소를 개선(94~2001·131개소·300km·13,211억원)
- 도로간 연계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지방도와 시관내 국도우회도로에 대하여도 국가에서 건설비 지원

□국도의 지역 간선기능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

- 병목지점 개선·교차로 입체화·오르막 차선설치·버스정차대설치등 소통개선사업을 연차적 추진(93~97 : 5,250억·1,580개소)
- 기계화 영농에 대비하여 국도상 지하횡단통로의 규격을 확대하고 국도 신설구간에는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
- 국도 주변지역에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

□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도로운영 효율화 방안 강구

- 이용자 중심의 도로표지판 개선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지자체·경찰청과 협의하여 신호체계도 개선
- 도로소통 상황·공사시행 상황 및 기상정보등을 이용자에게 신속히 전달하는 도로정보관리체계를 연차적으로 시행

□국민안전을 위한 도로관리체계 구축

- 교량관리 전담인력을 확충(국도유지사무소에 구조물과 신설)
- 교량의 안전점검 방법과 주기 및 점검자 자격기준 마련
- 교량관리상태를 전산화하여 데이터 베이스 구축
- 현수교·사장교등 특수교량은 민간전문회사에 위탁관리
- 과적단속을 위하여 97년까지 축중기등 시설현대화 추진

3. 간선철도의 수송능력 제고

□호남 및 동서고속철도 추진

- 호남고속철도는 금년하반기중 「건설기본계획」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에 착수
- 동서고속철도는 금년중 민자유치를 위한 「시설사업 기본계획」을 확정하여 민자유치를 공모

□ 가장 심각한 애로구간인 수원~천안간 2복선 전철화사업과 영동선 전철화사업을 지속 추진

- 수원~천안 : 55.6km, 6,115억원(90~2000)
- 영동선 : 87km, 755억원(89~96)

□ 광양항 컨테이너 화물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전라선 직선화 사업을 조속 완료하고 호남선 복선화사업도 지속 추진

- 전라선 : 199km, 16,216억원(88~2001)
- 호남선 : 716km, 4,433억원(91~2000)

□ 철도경영 개선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계부처 차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「철도경영 개선 추진위원회」를 구성·운영

- 철도청장에게 조직·인사·예산등 자율권을 공사화 수준이상으로 부여하고 기반시설 투자비에 대한 부담주체를 정립
-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정밀경영진단을 실시하고, 그 결과를 토대로 조직인력 절감·서비스 개선등 민영화 요소도입

4. 항만시설의 확충

□ 부산항과 광양항을 확충하여 2000년대 동북아의 중심항만으로 육성

- 부산항 4단계 사업은 97년까지 완료
- 부산권 신항만(가덕도)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하여 민자유치사업을 추진
- 광양항은 1단계 사업을 97년까지, 2단계사업을 2001년까지 완공목표로 추진

□ 화물별·지역별로 특화된 화물운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전국 권역별로 거점항 개발을 추진

- 금년중 권역별 신항만에 대한 투자우선순위를 정립

- 울산·새만금 신항만은 금년중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외곽시설에 대한 실시설계에 착수
- 기본계획이 마련된 인천북항·목포신외항·포항 신항만·보령항은 신항만간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건설시기를 조정

□물류비 절감을 위한 연안해운의 촉진

- 광양·포항·마산항에 연안화물 처리를 위한 전용시설 확충
- 인천~목포등 연안 컨테이너 항로를 추가 개설하고, 벌크화물 수송을 위해 현대화된 대형부선 운항을 확대

5. 권역별 거점공항 확충

□2000년 수도권 신공항 개항전까지 김포공항의 초과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시설을 최대한 확충하고 공항운영을 개선

- 계류장·터미널을 증설하고 레이다등 노후시설을 개량
- 공항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항공기 운항시간을 조정하고 관제능력을 향상

□전국 주요 권역별로 거점공항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

- 92년 착공한 청주공항은 금년중 완공
- 영동권신공항은 금년중 실시설계 및 용지매입을 완료하고 99.2월 동계 아시안게임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
- 김포·김해·대구·여수·울산등 기존공항도 여객터미널·활주로 등의 시설확충을 추진
- 호남권신공항은 2000년대 초반 개항을 목표로 기본조사 설계를 조속 추진

□국제 항공노선 개척

- 카다르·이란·모로코·카자흐스탄등 4개국과 신규 항공협정을 체결(협정체결국: 현재 70개국→74개국)
- 신규노선 개설과 운항회수 증대를 위하여 러시아·일본·남아공등 10개국과 항공협정 개정을 추진

6. 용수공급 확대를 위한 수자원 개발

- 2001년까지 수자원 이용율을 현재 23%에서 26%로 제고한다는 목표하에 물의 절대량을 확보하기 위한 「다목적댐」과 「광역상수도」 개발사업을 지속 추진
- 금년에는 건설중인 6개댐을 차질없이 추진하고, 계획중인 2개댐중 영월댐에 대한 조사설계에 착수
 - 건설중(6개) : 남강·용담·횡성·밀양·영천도수로·탐진댐
 - 계획중(2개) : 영월·적성댐
- 광역상수도는 금년중 2개를 완공, 6개를 새로이 착공하며, 3개사업에 대한 조사설계 실시(광역상수도 공급율 : 35%→36%)
 - 건설중(12개) : 낙동강Ⅱ, 부안댐, 전주권, 주암Ⅱ, 충주댐, 수도권Ⅴ, 보령댐, 광양Ⅱ, 녹산, 아산Ⅰ, 제주도, 밀양댐
 - 신규착수(6개) : 대청댐Ⅱ, 동화댐, 남강댐Ⅱ, 울산, 부산·경남, 포항권
 - 조사설계(3개) : 경기북부, 경북북부, 영남내륙권
- 전국적인 댐후보지 조사결과('94~'96)를 토대로 2000년대 용수수요에 대비한 「수자원 장기종합계획」을 수립
-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해 지하수 관측소 설치(37개소)·해수 담수화·임진강 유역조사등 기초조사 실시
-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5대강수계의 제방 180km를 축조하고, 안성천에도 현대적인 홍수예경보 시설을 금년부터 가동
- 내륙주운을 통한 물류비 절감을 위하여 금년중 민자유치사업으로 경인운하 건설사업체 착수

7.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 활성화

- 지난해 신공항고속도로를 착공한데 이어, 금년에는 모두 12건의 민자유치사업에 대한

사업자 선정을 차질없이 추진

- 고속도로 : 2건(천안~논산, 대구~대동)
- 경량전철 : 2건(서울~하남, 부산~김해)
- 신 공 항 : 6건(화물터미널, 열병합발전소, 급유시설 등)
- 경인운하·동서고속철도

□금년에 새로이 선정할 민자유치사업은 대규모 사업을 지양하고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소규모 사업에 치중하여 선정

□민자유치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등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

- 일정범위내의 상업차관 허용·장기금융지원 확대·초기단계의 주식상장 허용등 참여 기업의 재원조달을 적극 지원
- 준공 즉시 기부채납 방식(BTO)을 국제관례인 운용후 기부채납방식(BOT)으로 변경
- 현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1종시설에 대한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
- 민자사업에 대한 재정부담과 세제지원 확대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·추진

IV.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지역발전 추진

◇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아, 각 지방마다 지역특성에 맞는 자립적인 경제기반을 구축

◇지역균형발전을 통하여 지역간 통합성을 높임으로써 국가발전과 지역개발을 조화

1. 지역별 자립경제권 육성을 위한 광역권 개발추진

□지방대도시와 서해안 신산업지대를 중심으로 7대 「광역권 개발계획」을 수립·추진

- 부산~경남권 및 아산만권(94.12월 개발계획 확정)은 금년중 핵심사업에 대한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

- 나머지 5개 광역권(대구~경북·광주~목포·대전~청주·군산~장항·광양만권)에

대하여는 금년 상반기중 개발계획을 확정

□광역권 계획을 확정된 후, 권역별로 핵심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연차별로 추진실적을 점검

- 아산만권은 금년중 천안 신시가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자 지정
- 부산~경남권은 가덕도 신항만 개발계획을 수립

2. 체계적인 수도권 정비추진

□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산을 통하여 수도권으로의 집중요인을 억제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

- 아산만등 지방의 광역권 개발계획을 적극 추진
- 대전 제2행정타운 조성등 공공기관의 지방분산을 추진

□수도권의 과밀과 혼잡현상을 극복하고 수도권내부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정비시책을 추진

- 수도권이 「동경~서울~북경」을 연결하는 동북아 발전축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기능을 강화
- 서울중심의 공간구조를 다핵화하기 위하여 외곽의 기존도시를 중심으로 자족거점지역을 체계적으로 육성
- 수도권 전체를 연결하는 순환고속도로·철도·광역상수도 등 광역기반시설을 구축
- ※이러한 내용의 「수도권 정비계획」을 금년 상반기중 확정

□인구집중 유발시설에 대한 총량규제제도를 내실있게 운영

- 96년 공장건축 총허용량을 조기에 결정·고시하고 향후 2년간의 총량을 예고
- 수도권대학 입학정원은 최소한의 불가피한 증원만 허용

□수도권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 완화

- 공공청사중 문화·의료시설에 대한 입지규제를 완화
- 성장관리권역의 공업지역 지정을 확대
-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질 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행위제한을 합리적으로 조

정

3. 낙후지역 및 특정지역 개발사업 추진

□지역개발이 낙후된 지역을 「개발촉진지구」로 지정하여 지자체 주도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, 국가에서 소득 및 생활개방시설을 지원

- 1/4분기중 지구를 지정하고 연차적으로 개발사업에 착수

- 대상지역 : 강원탄광지역, 중부내륙산간지역, 경북북부지역, 덕유·지리산주변지역, 남해안도서지역

□기존에 추진중인 3개지역의 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

- 「백제문화권」은 입점리 진입도로공사를 금년중 착공하고, 백제역사 재현단지등 문화·관광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

- 「제주도종합개발계획」은 제주 일주도로 확장과 광역상수도 사업을 계속 추진

- 「전주권 2단계」 개발사업은 우회도로 등 7개사업을 완료하여 금년중 전체사업을 종결

4. 도시계획제도 개선

□본격적인 지자체시대를 맞아, 도시별로 각자의 특성에 맞는 도시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도시계획제도를 개편

- 지역·지구의 지정, 도시계획시설의 설치·관리등 미시적인 도시계획 권한은 모두 지자체에서 결정토록 권한이양

- 쓰레기처리장등 광역적인 기피시설을 원활히 설치할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도 도시계획 입안권을 부여

- 중앙정부는 시·도간 조정이나 개발제한구역 관리등 거시적인 사항이나 국가차원의 조정관리 역할을 담당

□도농통합시등 도시광역화에 따른 도시계획체계도 정비

- 현재 시가지로 한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의 공간적인 범위를 행정구역 단위로 변경

- 시구역으로 새로이 편입되는 토지는 시가화에 정구역·생산농림지역·취락지구등 새로운 토지용도를 신설

-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지자체로 하여금 토지상환채권 발행 허용

※이상의 내용을 담은 「도시계획법」 개정을 금년중 추진

□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는 제도의 골격은 확고히 유지해 나간다는 원칙하에서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나 통합시 공공시설 입지등 불가피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제완화 추진

5. 국토정보화 사업 추진

□정보화시대에 대비하여 지하매설물을 포함한 국토정보의 전산화사업(GIS)을 추진

- 금년부터 GIS의 기본이 되는 전국 지형도를 전산화하기 위하여 정밀 항공측량을 실시

- 과천시를 시범지역으로, 금년부터 전기·가스·상하수도·전화등 지하매설물 정보와 도면의 전산화 추진

□GIS를 교통·물류등 사회간접자본 및 토지정보와 연계하여 공공부문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금년중 세부추진계획을 수립

V.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교통불편 해소

◇교통불편은 선진국 진입에 앞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

◇대중교통체계 정착·교통서비스 개선등 가시적으로 느낄수 있는 교통불편 해소대책 추진

1. 도시철도·버스중심의 대중교통체계 정착

□서울·부산등 대도시권은 자가용이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대량수송이 가능한 도시철도와 버스 서비스를 대폭 확충

□2001년까지 6대도시의 교통체계를 도시철도 중심으로 정착시킨다는 목표아래, 도시철도 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(도시철도 수송분담율 : 서울 28%→50%, 부산 8.6%→40%)

-90년부터 수도권과 부산권등에서 건설중인 249.7km의 지하철중 금년에는 117.9km를 단계적으로 완공·개통

- 수도권 : 서울5호선(공항~왕십리 37km)·7호선강북(상계~화양 16km), 8호선(잠실~성남 15.5km)·일산선(지축~대화 21.1km)

- 대 구 : 1호선(월배~안심 28.3km)

-2002년 아시안게임 대비를 위한 부산 3호선을 금년중 조기착공하고 대구2호선과 광주·대전에도 지하철 건설 착공

-수도권등에 대도시전철망 확충방안을 마련

□지하철시대가 완전히 정착될때 까지는 버스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정시성과 서비스개선을 추진

-금년중 버스전용차로를 대폭 확대하고 수송효율이 높은 중앙전용차로를 시범운용('96중 127.5km추가 : 408km→535.5km)

- 시내버스의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

- 현재 수도권 지역에서 시범실시되고 있는 「버스요금 카드제」를 부산등 대도시로 단계적 확대 실시

- 일반 시내버스에도 냉방시설을 갖추고 고출력화하여 서비스수준을 준고속버스 수준으로 향상

- 시내버스 노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

- 노선직선화·지하철 연계노선 확충등 지자체로 하여금 버스노선의 합리적인 조정을 독려

- 대도시외곽에 공동차고지를 확대하고 지역별 공동배차제를 확대시행

□택시서비스 강화

-모범택시의 운행대수와 운행지역을 확대하고, 콜기능을 갖춘 수 있도록 금년중 무선

호출통신망 체계 구축

- 대도시와 인접지역간 택시사업구역의 통합을 적극 유도
- 택시요금 카드 지불제를 시행
- 승차거부등 고질적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 지속

2. 기존 교통시설의 운용효율화 추진

- 교통량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바뀌는 전자감응식 신호체계를 금년부터 서울지역에 시범 설치(시·도, 경찰청)
- 병목지점에 대한 교차로 입체화·횡단보도 조정·가변차선 확대실시등 도로구조 개선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
- 서로 다른 행정구역의 접경지역에 대한 교통소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자체간 협의를 활성화

3. 실효성 있는 교통수요 절감방안 추진

- 도심주차장을 억제하여 승용차의 도심이용을 적극 억제
 - 교통혼잡 가중우려 지역에 대하여 주차장설치 상한제 시행
 - 공공 주차장의 유료화를 확대시행하고 도심지 주차요금에 대한 차등폭을 확대
- 금년중 도심 혼잡통행료 부과를 서울지역에 시범실시
 - 다인승 차량 면제·전자감응식 자동징수 방안등 통행료 징수에 따른 불편해소방안 마련
- 기업체로 하여금 조기출근제 시행·통근버스 운영등 출퇴근 교통수요 절감방안을 추진토록 독려
 - 협력업체에 대하여는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추진

4. 도시계획 차원의 교통관리 정책 강화

□도시교통 영향평가제의 실효성 확보

- 교통영향 평가대상이 되는 시설 및 사업의 범위를 교통유발 원단위에 맞추어 새로이 조정
- 부실평가자 및 평가결과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을 이행하지 않은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등 벌칙부과 근거 마련

□도심재건축 및 재개발에 따른 교통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재개발기본계획 수립 시 교통대책을 적극 강구

□주차난 해소를 위한 시책 강화

- 지하철 역세권등 시외곽지역에 환승주차장을 대폭 확충
- 주차전용 건축물이나 민자복합 주차장에 대해 상가 등 복합시설 허용범위를 확대
- 기존 공동주택에 입체주차장 설치시 용적율·건폐율·녹지비율 등의 건축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유도책 강구
- 신규주택에 대하여는 1대 이상의 주차장 확보를 의무화
- 주거지역 이면도로에 대해 주차허가제 및 요금징수권 부여
- 자동차등록시 차고지확보를 의무화하기 위해 「차고지확보에 관한 법률」 제정·추진

5. 지역간 연계수송 체계구축

□수도권·부산권등 대도시권의 연계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「광역교통협의회」 구성등 지자체와의 협의체제 강화

- 협회가 제대로 안될 때는 우리부 관련 예산 및 지역개발 사업등을 수단으로 강력한 조정·통제수단 확보

□대도시와 위성도시간 대량수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금년중 경량전철 건설사업을 민자유치로 추진

- 수도권 : 서울~하남간(10.5km)
- 부산권 : 부산~김해간(26.3km)

□지역간 운송서비스 개선 추진

- 우등고속버스의 운영을 현재의 55%에서 70%선으로 확대하고 화장실 및 세면대를 설치한 고급 우등고속버스를 도입
- 고속버스 승차권의 전산발매를 위한 전국 전산망 구축을 금년 상반기중 완료하고 시외버스까지 확대 실시
- 노후 여객터미널에 대하여는 이전·개축등을 위한 국고지원제도를 도입
- 시외버스 요금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인·면허제도 개선등 종합적인 경영합리화 대책을 마련
- 농특세를 활용한 오지·도서 교통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

6. 미래형 교통시스템 구축

- 지능형교통시스템(ITS)개발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을 상반기중 수립하고 국책기술개발사업으로 선정하여 중점개발 추진
- 교통관리를 최적화하고 운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「도로정보화 사업」에 착수
 - 과천에 교통량 및 버스시간을 자동안내하는 시범사업 실시
 - 수도권에 고속도로·국도등 「도로정보시스템」 구축 추진
 - 도로 교통정보를 전화로 자동안내하는 서비스를 민자유치로 도입
- '98년 제5차 ITS 세계총회 개최가 결정된 서울대회에 대비하여 금년중 준비위원회를 구성·운영

7. 교통안전문화의 정착

- 교통안전을 위한 국민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, 금년 상반기중 2001년까지 추진할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
 - 계획범위 : 도로·철도·해운·항공등 전 교통분야
 - 계획목표 : 자동차 교통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
- 수송수단별 교통사고 요인제거에 총력

- 도로 : 사고다발지점 3,239개소를 2001년까지 연차적 개선
- 철도 : 건널목 27개소를 입체화 · 노후차량 1,479량 신규 대체
- 해운 : 노후여객선 20척 대체 · 선박 자동운항 관제시스템 설치
- 항공 : 돌풍탐지 경보시설 · 컴퓨터 기상자동관측시스템 설치

□대형자동차의 과속 · 난폭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마련

- 금년부터 고속 · 전세버스 · 덤프트럭에 소독제한기를 부착하고, 위험물운반차 · 대형화물차에는 운행기록계를 설치
- 대형승합차 · 화물차에 안전제동장치를 의무화하는 입법추진
- 건설기계로 관리하고 있는 덤프트럭을 자동차로 관리하여 주행시 위험요소 제거

□대형사고를 냈거나 빈번한 사고를 내는 업체에 대하여는 업체별로 사고원인을 진단하여 개선토록 조치

□안전확보 및 국민편의위주로 자동차 이용 · 관리제도를 개선

- 작년 택시번호판 개체에 이어 금년에는 전차종을 대상으로 번호판 개체를 실시(비사업용은 신규등록때 개체)
- 금년부터 사업용 노후차량을 제외한 「정기점검」은 폐지하고 「정기검사」는 검사기관을 2원화하여 국민불편을 최소화
- 현재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는 경정비업(카센타)중에서 건실한 업체는 제도권으로 흡수하여 정비의 신뢰성 제고
-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책임보험 배상한도를 상향조정(1,500→3,000만원)하고,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하여 「자동차 의료보수 심의회」를 구성 · 운영

VI.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물류 및 산업입지 지원

- ◇기업경영에 가장 큰 애로요인인 물류비용 절감을 위하여 중장기 물류개선계획을 착실히 추진
- ◇공장용지의 적기·적소공급과 21세기 미래형 산업단지 구축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

1.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물류체계 개선

- '94.7 마련한 범정부적 「종합물류개선대책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과도한 물류비용을 선진국 수준으로 절감하고 한반도를 동북아 국제물류의 중심지화
 - 물류비절감 목표(2003년) : 제조업매출액 대비 17%→11%
 - 선진국 수준 : 미국 7% · 일본 11%
- 지역거점별로 대규모 물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거점간 대량수송체제로 개편
 - 수도권내륙화물기지(의왕·부곡)를 금년중에 완공하고, 부산권내륙화물기지(양산)는 98년 완공목표로 차질없이 추진
 - 중부(청원·연기)·영남(김천)·호남권(장성) 복합화물터미널은 금년중에 건설기본 계획 및 민자유치계획을 수립
 -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정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「유통단지종합개발계획」을 수립
- 물류업무의 일괄처리서비스(One-Stop-Service)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「종합물류정보망」을 구축
 - 물류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전산망을 통한 전자문서교환(EDI)체제를 도입
 - 현재 개별적으로 추진중인 육·해·공 물류정보망을 하나로 통합하여 국가기간전산망으로 구축
 - 금년중 「종합물류정보망구축 기본계획」을 확정하고 전담사업자를 지정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
 - 금년말에 종합물류정보망의 시범서비스를 개시

□물류시설과 장비의 KS규격화를 통한 기계화·자동화를 촉진하기 위해 「표준화사업」을 지속적으로 추진

- 표준파레트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재정지원(금년 45억원)

- 국내화물수송용 표준컨테이너의 개발·보급을 위하여 재정·금융 등 정부지원방안 강구

• 국내용 컨테이너 구입시 투자세액 감면·운임할인 등

- 표준화된 물류시설·장비에 대한 「물류 표준마크」제 도입

□화물운수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진입장벽 제거 등 영업의 자율성을 제고

- 화물운수사업 진입규제 완화(면허제→등록제·기준완화)

- 화물운수업종의 단순화(6개→3개)

- 화물운수요금 자율화(신고제→자율결정)

※ 이를 위하여 금년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(가칭) 제정

□물류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'95년에 제·개정된 법률의 하위법령을 일제히 정비

- 종합물류정보망구축, 물류관리사 자격제도, 물류기술개발등(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·시행규칙)

- 유통단지심의위원회 구성,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의 수립, 사업시행자 지정 등(유통단지개발촉진법 시행령·시행규칙)

□기업의 물류개선노력을 고취하기 위하여 물류비 절감운동을 적극 전개

- 「'96 한국국제종합물류전」을 개최('96.6.19~23)

- 물류발전에 공이 큰 기업이나 개인을 격려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「물류대상」을 시상('96.11)

-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「물류정책자문단」을 운영

2.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

□신경제기간중 매년 750만평을 공급한다는 중장기 계획에 따라 금년에도 적기·적소의 공장용지 공급에 역점

- 구미4단지·발안·사천 등지에 산업단지 500~600만평을 새로 지정
- 아산·녹산·군장등 진행중인 전국 100여개 4천여만평의 공단개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
- 지방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제3섹타 및 신탁개발 방식도 입 등 개발방식을 다양화

□ 산업단지의 분양가 인하 및 분양촉진을 위하여 국가지원을 확대

- 금년중 8개 공단에 진입도로·공업용수 등 기반시설을 정부에서 지원(진입도로 373억·공업용수 693억원)
- 지방산업단지에도 정부에서 500억원의 용자지원 시행
- 입주허용 업종을 확대하고 인입철도등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방안을 강구

□ 미래지향적인 첨단·복합형 산업단지 건설을 위해 작년에 입법을 추진한데 이어 금년에는 하위법령을 정비

- 앞으로는 공장만이 아니라 물류·연구시설과 주거·공원등 복지시설이 복합적으로 들어설 수 있는 산업단지 개발
- 주요 하천의 중·상류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하·폐수처리시설을 완벽히 갖추도록 환경기준을 강화
- 선진외국의 산업입지 선정 및 개발실태에 대한 조사용역을 통하여 국내 산업단지 개발정책에 반영

□ 중소기업 입지난 해소를 위한 지원책 강화

- 지난해 도입된 「농어촌산업 지구제도」를 적극 활용
- 대규모 산업단지의 일정면적을 중소기업 임대용지로 공급
- 중소기업들이 몰려있는 도심지역에 대하여는 공장지역 재개발을 적극 유도
- 중소기업의 산업입지 탐색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금년중 「산업입지정보망」 구축에 착수

□ 지난해 추진한 산업단지 개발 및 공장설립에 따른 절차 간소화 시책을 조기 정착

- 인·허가 구비서류 감축(241→108종)
- 지방산업단지 개발에 필요한 행정처리 소요기간을 현재 1년에서 5개월 이내로 단축

-공장설립 인·허가 기간도 현재 60일에서 45일로 단축

□중국·베트남·러시아등 해외공단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

VII. 주거생활 향상 및 부동산시장의 안정

- ◇양적인 주택부족을 조기에 해소하고 선진주거복지실현을 위해 주택의 질적 수준을 제고
- ◇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는 토지수급의 균형을 통하여 부동산시장의 지속안정 도모

1. 선진 주거복지의 실현

가. '96년 주택건설계획

□신경제기간중('93~'97) 총 285만호의 주택을 건설한다는 목표하에 중장기 주택건설 계획을 추진중

	'92	'93	'94	'95	'96	'97
• 건설계획	55만호	55	55	55	60	60
(실적)	57만호	69	62	57	—	—
• 주택보급율	76%	79%	82%	84%	87%	89%

-96년중에는 50~60만호를 건설·공급(공공부문 20만호 이내)

※구체적인 건설물량은 미분양주택의 추이등 주택시장 여건을 보아가면서 「'96 주택건설종합계획」에서 확정

□신경제계획기간중 285만호 건설에 소요되는 공공택지 5,400만평중 미확보택지 89만평을 '96상반기중 확보

- 특히, 수도권에 필요한 2,400만평중 미확보된 272만평을 조기에 확보
- 96년초 택지개발가능지를 전면조사하여 생활권역별 택지수급대책등 「수도권 중장기 택지확보대책」을 수립
- 지자체실시로 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애로해소 방안을 강구

□96년중에 총 8조원의 주택자금을 조성하여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건설과 구입자금으로 지원

- 국민주택채권·재정차입금등으로 국민주택기금 4조 1천억원을 조성, 공공주택 건설 및 주거환경개선사업등에 지원
- 민영주택자금 약4조원을 조성, 민영주택 건설·구입을 지원

나. 저소득층 주거안정시책 강화

□도시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

-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확대(95년 70천호→96년 80천호)하고, 용자지원도 확대(50년 임대주택 : 호당 2,100만원→2,500만원)
-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,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완화, 주택매각 제한기간(3~10년) 단축등을 추진

□대도시권의 신규택지 고갈에 대처하고 서민주택공급을 확충하기 위하여 재개발·재건축을 활성화

- 재개발지구내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확대하고, 재개발장기계획 수립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추진
- 재건축 판정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체계적인 재건축 유도

□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시 변두리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

- 총 16만 3천호중, 지금까지 8만 3천호 개선, 96년에 2만호 개선

□노후·불량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과 철거·보수 등을 추진하여 입주민의 안전확보

- 모든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장·군수가 연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, 취약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특별관리

다. 주택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강화

□주택업체의 경영난해소를 위한 「주택시장 안정대책」을 차질없이 추진

- 미분양주택 구입자에 대하여 96년말까지 국민주택기금등 지원
- 주택업체 보유토지를 '96.3까지 주공과 토공에서 매입
- 미분양주택 해소등 주택시장의 추이를 보아 가면서 추가 지원대책을 강구

□주택업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주택분야규제완화

- 질 좋은 주택건설을 위하여 주택분양가제도 개선
 - 원가연동제 운용을 위한 '96 표준건축비 인상을 조기에 확정
 - 강원·충북·전북·제주등 일부지역 중대형주택 분양가자율화에 이어 단독·연립주택도 자율화 추진
-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건설되는 주택도 규모제한을 완화
- 주택단지의 이격거리 제한, 공동주택의 길이 제한 등 주택건설기준상 과도한 규제를 완화

라. 주택수요의 변화에 부응한 다양한 주택의 개발·공급

□마이너스 옵션제, 사양선택제, 가변형 벽체등을 적극 활용

- ##### □재택근무 확산·노령가구 증가등 수요패턴의 변화에 부응하여 3대 동거주택·원룸주택
- 오피스텔·실버주택 등을 활성화

마. 설계 및 자재의 표준화 추진

□분야별 표준화계획을 수립하고, 단계별 추진실적을 점검

□96년에는 우선 시행가능한 분야부터 표준화작업을 추진

- 창호재·보드류·보온재등 14종 자재를 우선 표준화 추진
- 공공주택 건설시 필요자재의 규격과 물량을 사전에 공시

2. 토지시장의 지속적 안정

가. 투기적 수요차단을 위한 제도정착

□각종 투기억제수단을 유기적으로 연계운영

- 투기억제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토지전산망 기초자료인 거래내역의 정확성과 공시지가의 적정성을 제고
 - 토지거래허가·신고, 검인대장의 부실기재 및 누락방지를 위해 시·군·구 담당공무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
 - 지가검증제도 도입 및 지가자동산정 프로그램의 전국적 운영
- 토지전산망을 활용하여 불법거래 및 탈세우려가 있는 자는 국세청에 통보하여 투기 및 탈세를 원천적으로 봉쇄
 - 토지거래빈번자(6개월에 3회이상), 당해 지역 미거주자, 가족관계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자, 부녀자·미성년자가 매입한 경우 등

□투기 조기감시체제의 적극 활용

- 투기예고지표에 의하여 투기조짐지역을 조기에 포착
 - 지가 1%이상(분기별)·거래량 10%이상(전년동기대비)·공부 발급량 20% 이상 증가 지역
- 투기조짐지역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투기대책반을 즉각 투입, 단속 활동 전개

□개발사업예정지등은 거래허가구역으로 미리 지정하고,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실태조사등 사후관리 강화

- 토지이용을 방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유휴지 지정조치
- 유휴지 지정후에도 고의로 이용·개발하지 않을 경우, 강제매수 조치하고, 미이용전 매 토지는 국세청에 통보
-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에 있어 실수요자 심사를 정확하게 하여 투기적 가수요 억제

나.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공급 촉진

□준농림지역에서 생활 및 생산활동과 관련된 토지이용 규제완화 등 지난 '95.10월에 제 도개선한 사항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차질없이 추진

□지자체별로 수립하고 있는 「토지수급계획」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가용토지 공급을 확대

-이를 위해 토지수급계획 운영방안을 보완

다. 토지이용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

□토지거래허가제, 택지소유상한제 등 토지공개념제도 운영에 있어 과도하게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은 합리적으로 개선

VIII. 부실공사 방지 및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

◇부실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설물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불안 해소
◇시장개방에 대비하여 기술개발 등 경쟁력을 제고하고 해외건설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강화

1. 부실공사방지 및 시설물안전관리 강화

가. 건설공사 부실방지대책

□'92.7월 신행주대교 사고이후, 부실방지와 안전확보를 위해 제반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보완

-그러나 아직도 크고 작은 부실사고가 발생하고, 부실방지를 위한 제도가 일선기관과 공사현장에는 정착되지 못한 상태

-삼풍백화점 사고를 계기로 범부처적으로 마련한 부실방지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

□민간 건축활동에 대한 감리강화

-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사 개인감리의 한계를 감안하여 감리전문회사에 의한 책임감리수준으로 강화

-일반건축공사에도 감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리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

감리업무의 내용을 구체화

□건축설계 허가에 따른 안전심의 강화

- 다중이용시설 설계시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확인을 의무화
- 다중시설에 대한 건축허가시에도 자치단체의 건축심의 제도를 통한 구조심의를 강화

□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자기공사라 하더라도 도급공사와 같이 시공능력을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 도입

□건설현장의 품질관리체제 구축

- 철강재를 특정공장에서 제작토록 하는 「공장인증제」 도입
- 시공자의 현장레미콘 생산시설 설치범위를 확대
- 건설자재산업을 육성하고 표준화·정보화를 조속 추진

□건설단체를 중심으로 「건설시공다짐대회」 결의대회 개최등 자율적인 부실방지노력을 유도

- 건설협회등에 「윤리위원회」를 구성하여 불량업체 제재

□현장기능공에 대한 의식개혁 및 사기진작책 마련·시행

- 기능공에 대한 현장의식교육 실시 및 복지제도 도입 등

□지난해 마련된 부실공사 관련벌칙 강화를 계기로 부실공사에 대하여는 엄격한 신상필벌의 원칙 확립

- 고의적 부실공사로 인명사상을 초래할 경우 3년이상 무기징역에 처함

나. 시설물 안전관리강화

□「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」에 따라 기존시설물의 철저한 안전점검과 사후관리를 정착

- 도로·댐·대형건축물 등 총 4,827개소에 대하여 관리주체별로 안전·유지관리계획 수립·시행(2,883개소 기수립)
 - 일상점검 : 분기 1회
 - 정기점검 : 1~3년 1회
 - 정밀점검 : 5년 1회
- 안전진단 대상 다중이용건축물을 확대(3만 m^2 이상→5천 m^2)
- 다중건축물에 대하여는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가입 의무화 검토

□개·보수가 필요한 교량·지하철·항만 등 주요시설물은 가능한 한 금년까지 개·보수 완료(총 714개소)

□효율적인 시설물 안전진단을 위해 안전관리기준을 정비

-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안전진단 기술지침 정비
- 안전관련 예산의 충분한 확보를 위한 편성기준 마련
- 합리적인 안전진단 대가 기준의 마련

□안전진단전문기관 육성 및 진단종사자 양성

- 시설안전기술공단('95.4 설립)의 인력 및 장비보강
- 안전진단종사자에게 진단기법 전문교육 실시

2. 건설산업 경쟁력강화 대책

□내년 건설시장의 본격개방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난해 「건설제도개혁기획단」을 통하여 「경쟁력강화방안」 마련('95.12)

□건설제도의 국제화 및 경쟁기반 구축

- 시공위주의 건설산업구조를 기획·설계·시공·감리등 종합적인 공사수행체제로 전환 : 「건설사업관리제도」 도입 등
- 하도급제도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심장제도를 양성화하여 제도권에 흡수하는 「공사 현장실명제」 도입
- 건설업체에 대한 신용평가제를 도입하여 부실업체 배제
- 산학연 공동연구개발사업 확대등 건설기술 연구개발촉진

□건설인력 육성 및 고용안정

- 대학 건설관련학과 정원을 증원하고 국가기술자격자 배출인원을 대폭 확대
- 기능공에 대하여 공제금 등을 지급하는 「건설근로자 복지제도」를 도입하고 체계적인 훈련실시

□공사시행기관의 전문성 및 책임성 제고

- 도급한도액제도 대신 「시공능력공시제」를 도입

- 계속비제도 활성화·예산전용권 위임등 예산제도 개선
- 발주자와 설계자·감리자·시공자간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

□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

- 공사대금의 어음 또는 채권 지급관행을 단계적으로 축소
- 공사대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간을 단축
- 건설경기 둔화에 대비 시설공사비(2조 4천억원)를 조기집행
-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를 조기에 정착

3. 해외건설 촉진을 위한 지원제도 강화

□중동과 동남아에 치중되어 있는 해외건설업을 제3세계를 포함한 전세계적으로 다변화하는 적극적인 건설외교 추진

- 중국, 말레이시아 등 주요 진출국에 대한 건설협력 강화 및 수주 지원을 위해 장관급 방문추진('96 상반기)
- 기존의 실무급 건설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·일 건설경제 교류회의(동경, '96.6), 한·중 건설산업협력회의(서울, '96.9) 개최
- 건설투자확대가 전망되는 이스라엘·PLO·라오스 등지에 민·관 합동조사단 파견('96 상·하반기에 각기 1회이상)

□금융조달 요청공사의 증가에 따라 업체의 해외금융조달여건개선을 위한 외환제도 개선

- 해외건설 계약시 주거래은행 인증제를 신고제로 전환
- 현지법인의 금융차입시 국내본사의 지급보증절차 간소화